

2002 지방예산개요와 운용방향

이 삼 겔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I. 머리말

21세기에 접어들어 지방자치와 국가경제에 있어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예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새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예산이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IMF 경제난 극복과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의 준비,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SOC의 확충,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추진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민의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지식정보화시대의 계층간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 한편, 예산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재정 전반의 투명성에 관한 IMF의 검토보고서(ROSC)에서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재정통합수지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운영은 지방예산이 당면한 과제로서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자 평가의 척도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

점에서 2002년 지방예산의 여건을 전망하고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후, 지방예산의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2002년 지방예산의 여건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선진국 경제의 동반하락,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지속되고, 국내적으로는 수출투자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제한적 경기조절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3/4분기를 고비로 서서히 회복기미를 보이며 경제성장률 2.8%, 물가 4.3%, 경상수지 흑자 98억불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직도 엔화 약세, 통상마찰 우려, 대테러전쟁의 확산가능성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수출투자가 아직도 부진한 상황에 있어 우리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경제의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연초

부터 불기 시작한 금연 열풍은 지방세입의 9.4%정도를 점유하는 담배소비세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세입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출측면에서는 금년 5월말 개최 예정인 월드컵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경기장시설과 도로, 지하철 등 계속중인 각종 SOC사업의 마무리, 지식정보화사회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으로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는 제3기 6·13 전국 4대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소모적인 행사성 경비 및 선심성 민간지원경비의 증가가 우려되고, 지역안배의 소규모 분산투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III. 2002년 지방예산운용의 기본방향

금년도는 제3기 민선자치의 첫해로서 그동안의 공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의 자기책임성과 재정관리기능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구조의 건전화·안정화 및 재정운영의

	'97	'98	'99	2000	2001
·경제성장률(%)	5.0	△6.7	10.7	8.8	2.8
·소비자물가(%)	4.5	7.5	0.8	2.3	4.3
·경상수지(억불)	△82	404	245	114	98

자료 : 재정경제부 2002년 업무보고

투명화·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 효과의 획기적 향상과 아울러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가. 경상예산의 적극 절감 및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의 거품을 제거하는 등 재정상황의 변화에 따른 안정적 세입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경상예산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 확보차원에서 규모를 줄여나가는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감채기금조례의 설치 및 기금 적립을 제도화하여 채무상환에 대비하고, 채무가 과다한 단체는 『5개년 채무감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채무를 적극 줄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투자재원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있어 ‘계속사업·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운영하고 새로운 공약 등을 이유로 진행중인 사업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신규투자는 전체의 효율성(Total-Efficiency)보다는 지역과 집단 및 계층의 이해를 앞세운 임시적·일회적·소모적인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도록 하였고, 투자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자의 효과가 수혜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여 실질적 성과향상에 중점을 둔 전략적 재정운영을 실천토록 하였다.

나. 재정관리제도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향상

금년도에는 자발적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미승인 발행, 투·융자심사 미실시, 예산편성 등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시 교부세 일정액을 감액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재정페널티제를 도입하고 현재 경상경비절감 등에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제반 주요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10억이상 행사성 경비와 10억이상 해외투자 및 외국차관도입사업 등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확대하였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연계한 보조적 지표로서 2000년 최초로 도입하여 16개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에는 제도보완을 거쳐

<지방재정운영상황측정의 측정내용과 기대효과>

측정항목	측정내용	기대효과
경상경비지표	경상경비의 구성 및 증감실태	경상경비 절감유도
민간지원경비지표	민간지원 가능경비의 구성비 및 증감실태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낭비억제
행사경비지표	투자사업비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낭비 억제
투자심사예산반영지표	투자심사결과의 예산반영정도	투자의 효율성 제고
소액투자비 지표	전체투자비 및 자체사업비중 소액투자비 비율	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범 적용한 바 있는 『지방재정 운영상황측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동 측정기법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세출중심의 측정으로 계량 및 비계량 분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자치단체의 불건전재정운영을 측정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재정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재정우수단체 및 진단대상단체 선정에 적용하고, 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측정결과를 환류(feedback)시킬 예정이다.

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지역 성장 잠재력 개발투자 확대

미래에 대비하여 지식정보화가 촉진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정보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구현,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저소득 주민·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

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등 사회복지 확충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확충,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을 적극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가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지방투자예산을 금년 상반기에 80% 이상 배정하고, 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당면한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월드컵개최도시 및 광역단체의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개최와 관련한 도시기반시설확충, 관광객유치를 위한 환경정비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라. 지방예산의 투명화정보화 핵심추진

최근의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관심사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의 제고라고 하겠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집행내역 공개요구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국제적으로도 IMF에서 재정투명성 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을 평가한 내용 중에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재정 포함, 기금과 특별회계 운용의 합리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가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운용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뒷받침되어야 예산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정보화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예산정보의 신속정확하고 전국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예산운용의 정보화·투명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LBIS, Local Budge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구축된 LBIS자료를 기초로 표준화된 재정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단계로 구축된 LBIS를 토대로 예산집행 및 결산을 연계하여 지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산집행 및 결산자료도 인터넷을 통해 공

개함으로써 지방예산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IMF기준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를 지방재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 등 공공부문의 총지출규모에서 용자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재정활동이며, 통합재정수지는 순수재정수입에서 순수재정지출(통합재정규모)을 차감한 재정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러한 통합재정 분석을 통하여 재정건전성과 함께 정확한 공공재정의 규모 및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간 공공재정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과목구조의 정비, 사업예산의 표준분류코드 작성 등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 시범적용을 거쳐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2003년도부터는 지방재정에도 통합재정수지분석제도를 본격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식부기 도입으로 하나의 거래를 대·차에 이중으로 기입하게 되어 예산집행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1999년 시범기관으로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회계규정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금년도에는 시험운용 및 자산

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계층별·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 시범도입함으로써 전국 확대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및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V. 2002년 지방예산의 개요와 특징

1. 2002 지방예산 총규모

2002년도 국가와 지방의 당초예산 총규모(순계)는 217조 3,535억원이며, 이 중 지방예산이 71조 3,933억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 지방예산의 순계 총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

가하였지만, 지방교육세(3조 2,782억원)를 제외할 경우 5.6% 증가에 불과하고, 2001년 최종예산 79조 6,430억원보다는 10.4% 감소한 규모다. 세입구성을 보면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35.0%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인 54조 900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49조 564억원에 비하여 10.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24%인 17조 3,033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1% 증가하였다.<표 2> 참조.

최근 5년간의 예산증감추세를 보면, 올해의 예산증가율은 2000년도와 비슷한 10.7%로서 2001년도 증가율 16.2%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표 3> 참조

<표 1>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계규모 비교

(단위 : 억원)

2002 총예산규모(중앙+ 지방) 217조 3,535억원							
중앙정부 145조9,602(67.2%)		자치단체 71조 3,933(32.8%)					
		의존재원 24조 9,822(35.0%)			자체재원 46조 4,111(65.0%)		
국세	기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1,036,499	423,103	103,123	47,584	99,115	249,097	185,942	29,072
(71.0%)	(29.0%)	(14.4%)	(6.7%)	(13.9%)	(34.9%)	(26.0%)	(4.1%)

<표 2> 회계별 예산규모

구분	2002	구성비(%)	2001(당초)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계	713,933	100	644,892	100	69,041	10.7
일반회계	540,900	76	490,564	76	50,336	10.3
특별회계	173,033	24	154,328	24	18,705	12.1

<표 3> 연도별 예산규모 신장추세

(당초예산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예산규모	577,553	500,654	555,088	644,892	713,933
전년대비증가액	45,129	△76,899	54,434	89,804	69,041
증가율(%)	8.5	△13.3	10.9	16.2	10.7

2.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를 보면 광역단체가 61.3%인 43조 7,503억원, 시가 22.3%인 15조 8,966억원, 군이 11.5%인 8조 1,856억원, 자치구가 4.9%인 3조 5,608억원으로 구성되어, 광역 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구성 비율이 61 : 39로 나타났다. 예산증가율은 광역자치단체가 11.7%, 기초자치단체가 9.1%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친 지역별 예산규모를 보면 서울지역이

17.6%인 12조 5,775억원, 6개 광역시 지역이 20.6%인 14조 7,050억원, 도 지역이 44조 1,10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도와 대동소이한 분포이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전체규모의 17.6%인 12조 5,77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2조 427억원, 경남이 6조 946억원, 전남이 5조 2,965, 경북이 5조 2,410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4>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당 초)	구성비	2001	구성비	증(△)감	%
지역별	· 서울	125,775	17.6	124,577	19.3	1,198	0.9
	· 광역시	147,050	20.6	135,349	21.0	11,701	8.6
	· 도	441,108	61.8	384,966	59.7	56,142	14.6
계		713,933	100	644,892	100	69,041	10.7
단체별	· 시도본청	437,503	61.3	391,478	60.7	46,025	11.7
	· 시	158,966	22.3	145,364	22.5	13,602	9.4
	· 군	81,856	11.5	74,775	11.6	7,081	9.5
	· 자 치 구	35,608	4.9	33,275	5.2	2,333	7.0

주) 지역별구분 : 광역+ 기초자치단체 예산액

<표 5> 시·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별			단체별		2001당초 (B)	증감율 (A/B)
	계(구성비) (A)	일반	특별	시·도	시·군·구		
합 계	713,933(100)	540,900	173,033	437,504	276,429	644,892	10.7
서울	125,775(17.6)	93,911	31,864	106,231	19,544	124,577	1.0
광역시	147,050(20.6)	96,896	50,153	126,871	20,178	135,349	8.6
부산	44,715	27,751	16,964	39,487	5,228	38,096	17.4
대구	28,432	19,657	8,775	24,877	3,555	25,142	13.1
인천	30,157	19,872	10,285	25,119	5,038	30,194	△0.1
광주	16,517	10,521	5,996	14,544	1,973	17,364	△4.9
대전	15,315	10,349	4,966	13,236	2,079	14,794	3.5
울산	11,913	8,746	3,167	9,608	2,305	9,759	22.1
도	441,109(61.8)	350,093	91,016	204,402	236,707	384,966	14.6
경기	120,427	87,271	33,156	58,474	61,953	103,149	16.8
강원	37,075	31,593	5,482	14,871	22,204	31,841	16.4
충북	26,444	21,863	4,581	12,543	13,901	23,941	10.5
충남	38,629	30,892	7,737	18,006	20,623	35,890	7.6
전북	37,532	31,632	5,900	16,456	21,076	35,135	6.8
전남	52,965	43,546	9,419	26,665	26,310	43,183	22.7
경북	52,410	44,220	8,190	21,104	31,306	47,537	10.3
경남	60,946	46,405	14,541	28,054	32,892	51,604	18.1
제주	14,681	12,671	2,010	8,239	6,442	12,686	15.7

3. 2002 지방예산의 분석

가. 세입구조

2002년도 지방예산규모(순계)의 세입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전체의 34.9%인 24조 9,0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26.0%인 18조 5,942억 원, 지방채가 4.1%인 2조 9,072억 원으로 자체재원이 65.0%인 46조 4,111억 원이며,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14.4%인 10조 3,123억 원, 지방양여금이 4조 7,584억 원, 국고보조금이 13.9%인 9조 9,115억 원으로 의존재원이 35.0%인 24조 9,822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세입원별 증감내역을 2001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방세 6.1%, 세외수입 7.8%, 지방교부세가 21.9%, 지방양여금이 15.7%, 국고보조금이 12.0%, 지방채가 23.9% 증가하였다.

<표 6> 세입원별 증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2002년도(A) 구성비(%)	713,933 (100)	249,097 (34.9)	185,942 (26.0)	103,123 (14.4)	47,584 (6.7)	99,115 (13.9)	29,072 (4.1)
2001년도(B) 구성비(%)	644,892 (100)	234,748 (36.4)	172,437 (26.7)	84,604 (13.1)	41,133 (6.4)	88,499 (13.7)	23,471 (3.7)
A/B(%)	10.7	6.1	7.8	21.9	15.7	12.0	23.9

2002년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4.6%로 2001년도(당초예산 기준)의 57.6%보다 3.0% 낮아졌다. 이는 의존재원의 증가율(16.6%)이 자체재원의 증가율(6.8%)보다 9.8%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여건에 따라 광역·기초간, 도시·농촌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94.7%, 광역시 66.0%, 도 34.6%, 시 47.5%, 군 19.1%, 자치구 46.0%로 나타나고 있다(<표 7>참조).

2002년도 지방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총계)은 총 9조 9,115억원으로 2001년 8조 8,499억원보다 1조 161억원 증가되어 12.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각 중앙부처를 통해 파악한 국가의 국고보조사업예산은 10조 7,633억원, 지방비 부담액은 5조 6,469억원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각각 10조 3,123억원과 4조 7,584억원이지만 국가의 배정 확정액은 각각 11조 6,852억원과 4조 3,496억원이다.

이처럼 의존재원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

<표 7> 2002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구 분	전 국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54.6	94.7	66.0	34.6	47.5	21.0	45.0
최 고 (단체명)	-	94.7 (서울)	73.1 (인천)	70.1 (경기)	94.8 (과천)	58.5 (울주)	93.7 (서울중구)
최 저 (단체명)	-	-	56.7 (광주)	13.7 (전남)	14.3 (문경)	9.2 (장흥)	21.5 (광주남구)

주) 전국 및 시도별 재정자립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계규모를 사용하고, 개별 단체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총계예산규모를 사용

<표 8> 세출성질별 구성

(단위 : 억원)

구 분	2002	구성비	2001(당초)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13,933	100	644,892	100	69,041	10.7
○ 경상예산	165,653	23.2	150,190	23.3	15,463	10.3
- 인건비	74,708	10.5	66,877	10.4	7,831	11.7
- 경상적경비	90,945	12.7	83,313	12.9	7,632	9.2
○ 사업예산	388,360	54.4	353,105	54.8	35,255	10.0
- 보조사업	223,292	31.3	198,706	30.8	24,591	12.4
- 자체사업	165,063	23.1	154,399	24.0	10,664	6.9
○ 채무상환	41,752	5.8	37,464	5.8	4,288	11.4
○ 예비비등	118,168	16.6	104,133	16.1	14,035	13.5

산에 반영된 규모와 국가의 배정 확정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가 지원예산의 확정 내시가 지방예산 편성시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부처에서는 회계연도 하반기까지도 국고보조금의 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입내역을 종합해 보면, 올해의 지방예산도 종전과 같은 취약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조세에 대한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이 형식적으로는 81:19으로 작년의 80:20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도 소비와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작년 대비 7.8%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교육재정지원 증가, 생산적 복지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부담 증가, 사업단가 상승 등으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충족율이 지방교부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 92%, 2001년 78%에서 올해는 77.5%로 점

점 낮아지고 있다.

나. 세출구조

2002년도 지방예산규모(순계)를 세출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3.2%인 16조 5,653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0.5%인 7조 4,708억원이고 사업예산은 54.4%인 38조 8,360억원, 채무상환이 5.8%인 4조 1,752억 원, 예비비등이 16.6%인 11조 8,168억 원이다. 이를 2001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총예산규모는 10.7%가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0.3%, 사업예산은 10.0%, 그리고 예비비등이 13.5% 증가하였다(<표8> 참조).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월드컵 개최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가 주된 인상요인이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가 50.5%인 36조 62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제개발비가 26.8%인 19조 1,256억 원, 일반

행정비가 16.5%인 11조 8,042억원 지원 및기타경비가 4.3%인 3조 681억원 순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이를 2001년도와 비교하면 지원및기타경비가 23.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민방위 14.5%, 사회개발비가 12.2%, 일반행정이 7.8%, 경제개발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참조).


V. 맺음말

금년도 지방예산은 IMF 경제위기 당시의 부동산 경기 등 실물경기 침체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기둔화에 따른 실업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지출과 교육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단위 SOC투자, IT·BT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준비의 마무리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축재정운

용을 통하여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국가적 과제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실업난 완화를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동안 낭비성·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많았고, 시민단체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선심성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불건전재정운영상황측정제도 도입과 불건전재정운영상황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재정 실현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하겠다. 

<표 9> 기능별 세출구조

(단위 : 억원)

구 분	2002	구성비(%)	2001(당초)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13,933	100	644,892	100	69,041	10.7
일반행정	118,042	16.5	109,547	17.0	8,495	7.8
사회개발	360,627	50.5	321,342	49.8	39,285	12.2
경제개발	191,256	26.8	177,510	27.5	13,746	7.7
민 방 위	13,327	1.9	11,642	1.8	1,685	14.5
지원및기타경비	30,681	4.3	24,851	3.9	5,830	23.5